20. 第2次 首都圈 整備計劃(案)

資料提供 : 國土開發研究院

Ⅰ. 수도권정비계획의 배경

1. 계획성격 및 범위

□ 계획의 성격

- 이 계획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장기종합계획으로서 수도권정비의 기본방향, 인구 및 산업배치, 권역별 정비방향, 광역시설의 정비 등에 관한 기본적인 것을 정함.
- 이 계획은 수도권 안에서의 다른 법령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또는 각종 개발계획에 우선하고 그 계획의 기본이 됨.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 계획과 부합되는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등을 수립·시행하며, 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소관별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함

□ 계획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특별시, 인천직할시 및 경기도 전역
- 계 획 기 간 : 1997~2011년 (15년간)

□ 계획의 운용

- 이 계획은 국토종합개발계획 등 본 계획과 관련된 중요한 계획이 개정 또는 새로이 수립되는 경우나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 본 계획의 내용실현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함

2. 수도권의 현황과 문제점

가. 수도권 현황

- 수도권은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11.8%를 점하나 총인구의 44.9%, 총사업체의 57.9%, 예금·대출의 60.6%의 공공기관의 81.7%를 점하는 등 경제·사회·행정·문화활동의 중심지임.

수도권 집중현황 (1994년 현재)

구 분		전 국	수도권 (%)
인구주택	면 적 (㎢)	99,394	11,726 (11.8)
	인 구 (천명)	45,512	20,445 (44.9)
	인구밀도(인/㎢)	458	1,744
	주택보급율(%)	79.1	72.0
지역경제	지역총생산액(십억원)	262,517	126,337 (47.2)
	총사업체수(개소)	167,403	96,964 (57.9)
	제조업체수(개소)	91,372	50,810(55.6)
	금융 예금(십억원)	135,190	88,517 (65.5)
	금융 대출(십억원)	135,850	82,315 (60.6)
기능	4년대학수	131	56 (42.7)
	공공기관수(개소)	513	419 (81.7)
	주요기업본사(개소)	100	88(88.0)
	연구기관(개소)	2,248	1,540(68.5)

나. 문제점

○ 국토개발상의 불균형 초래

- 수도권과 지방간 및 수도권내의 과밀·과소지역간 격차발생 초래
- 지역격차 발생 및 낙후로 낙후지역주민의 반발 초래

○ 도시문제의 심화

- 수도권 경제활동 증가에 따른 주택난, 교통혼잡 및 공해 등의 증가
- 시설의 밀집 및 지가상승 등으로 도시기반시설 공급비용 상승

○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

- 수도권내의 무질서한 개발이 다수 이루어져 국토 및 자연환경 훼손
- 공장립지 규제에 따라 무허가 및 공해공장의 증가로 생활환경 저해

3. 수도권정비시책의 추진

- 60년대 초반부터 수도권집중에 의한 지역격차 및 도시문제 발생을 인식하고 「대도시인구집중방지책」을 시작으로 1984년의 수도권정비기본계획 등을 수립·추진
- 1994년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국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수도권시책의 효율화 등 시책방향의 전환

< 단계별 수도권 시책의 전개 >

추진 단계	년도	시 책 명	주 관
문제인식기	1964	대도시 인구집중 방지책	건 설 부
	1969	대도시 인구 및 시책의 조정대책	무임소장관실
시책형성기	1970	수도권 인구과밀억제에 관한 기본지침	건 설 부
	1970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 (1972-1981)	건 설 부
	1972	대도시 인구분산시책	청 와 대
	1973	대도시 인구분산책	경제기획원
	1975	서울시 인구소산계획	서 울 시
정비추진기	1977	수도권 인구재배치 기본계획	제1무임소장관실
	1981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1982-1991)	상 공 부
	1982	수도권내 공공청사 및 대규모 건축물 규제계획	건 설 부
	1984	수도권 정비기본계획	건 설 부
	1992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1992-2001)	건 설 부
시책전환기	1994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 개정	건설교통부
	1997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	건설교통부

II. 수도권정비의 기본전략

1. 여건변화 전망

○ 세계화와 개방화시대의 도래

- 동북아의 중심지로 도약하려는 서울과 수도권 역할의 중요성 증대 예상

○ 통일관련기능의 확대와 자연환경의 중요성 부각

- 남북교류 협력기반 조성과 광역교통망의 체계적정비에 대한 필요성 증대
- 수도권에서의 자연환경보전과 생활환경개선 요구의 증대 예상

○ 기술혁신과 광역도시화의 진전

- 교통·통신의 발달, 사회적비용의 급속한 증가로 수도권 공간구조 재편
- 서울과 주변도시에 밀집된 인구 및 산업이 외곽지역으로 광역화할 전망

< 수도권 공간구조 변화 전망 >

지 역	변 화 전 망
서 울	· 도심 상주인구 감소, 도심공동화문제 대두 · 기능의 고도화에 따른 국제·정보의존형 업무 성장
서 울 근 교 (서울반경 20㎞내)	· 인구안정, 제조업기능 쇠퇴 · 서울의존도 심화에 따른 자족기반구축 요구 증대
서울중근교 (서울반경 40㎞내)	· 인구의 안정 성장, 도시간 기능의 상호분담 체계구축 · 서울의 업무기능 및 근교부의 제조업기능의 이전 활성화
서울원교 (서울반경 40㎞밖)	· 인구증가율의 급속한 신장 · 특화된 기능의 도시 성장 및 도농 통합형도시 발생

2. 장래전망 지표

○ 인구 지표

- 수도권의 추세인구는 2001년에 전국인구의 50%(2,310만명), 2011년에 전국인구

의 54%(2,700만명) 예상

- 인구집중억제의 지속 추진으로 2011년에는 1994년 수준인 전국인구의 45%(2,224만명) 선으로 억제

< 수도권 인구지표 >

(단위 : 천인)

구 분	1994	2001	2011	년평균 증가율(%)		
				'81-'91	'91-01	'01-11
전 국	45,512	47,150	49,865	1.25	0.72	0.56
수도권	20,445	22,500	22,240	3.33	1.64	-0.12
(%)	(44.9)	(47.7)	(44.6)			
서울	10,799	10,600	10,200	2.31	-0.28	-0.38
인천	2,208	2,550	2,618	5.57	2.65	0.26
경기	7,438	9,350	9,422	4.65	4.12	0.15

○ 주택공급

- 가구원수 감소와 1인가구의 증가로 주택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주거수준 향상에 대한 욕구도 증대할 전망
- 수도권 주택보급율이 2011년 이전에 100% 달성될 수 있도록 주택을 공급

< 수도권 주택공급 호수>

기 간	1995	2001	2006	2011
주택보급율 (%)	76.5	84.5	95.4	103.5
주 택 수 (천호)	3,866	5,086	6,025	6,793

○ 공업용지 수급

- 현 추세가 유지될 경우 수도권의 공업생산비중이 2001년에는 38%, 2011년에는 37.5%로 전망되어 신규 공업용지수요는 2011년까지 49㎢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
- 수도권의 공장용지는 멸실면적을 포함한 가동면적 기준으로 2001년까지 27㎢, 2011년까지 44㎢를 공급

〈수도권 공장용지 공급〉

구 분	1993	2001	2011	증 가 량		
				'93-'01	'01-'11	'93-'11
전 국 (㎢)	455	640	800	185	160	345
수도권 (㎢)	118	143	159	25	16	41
서 울	11	9	8	-2	-1	-3
인천·경기	107	134	151	27	17	44

3. 기본목표와 전략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자족적인 지역생활권 육성

- 과밀억제권역에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을 수도권내 외곽으로 분산
- 분산형의 다핵공간구조로 개편하고 자족적인 중심도시권 육성
- 기능분산 촉진을 위한 지역간 연결 광역교통체제의 확충

세계화에 대비한 수도권기능 제고와 통일대비 기반 구축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산업고도화 관련기능 확충
-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국제 및 수도기능이 미약한 시설입지는 억제·이전
-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협력 공간 마련 및 남북교류망 확충

쾌적한 생활환경의 확보와 자연환경 보전

- 주택, 상·하수도 교통시설, 통신망 등 기반시설의 확충
- 도심혼잡, 대기 및 수질오염 등 환경문제를 적극 개선
- 개발과 보존의 조화로 자연환경 파괴의 적극 억제

III. 수도권 공간구조의 개편

1. 기본방향

□ 기본방향

- 세계화와 지방화 및 통일에 대비한 미래지향적 공간구조의 기틀을 마련
- 지역특성별 자족성 제고로 수도권외곽생활권 구축
- 수도권과 지방, 수도권내 지역간 적정수준의 기능분담을 추진

□ 추진전략 ·

- 공간구조 개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 분담
  - 중앙 : 공간구조 개편방향 제시, 광역기반시설 확충
  - 지방 : 구체적인 정비계획 수립, 지역생활권내 기반시설 확보
-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이 계획의 방향에 부합하는 지역생활권별 발전계획을 '98년말까지 수립하여 수도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추진
  - 지역생활권별 정비계획은 지역특성별 자족적인 생활권역으로 육성하는 추진시책을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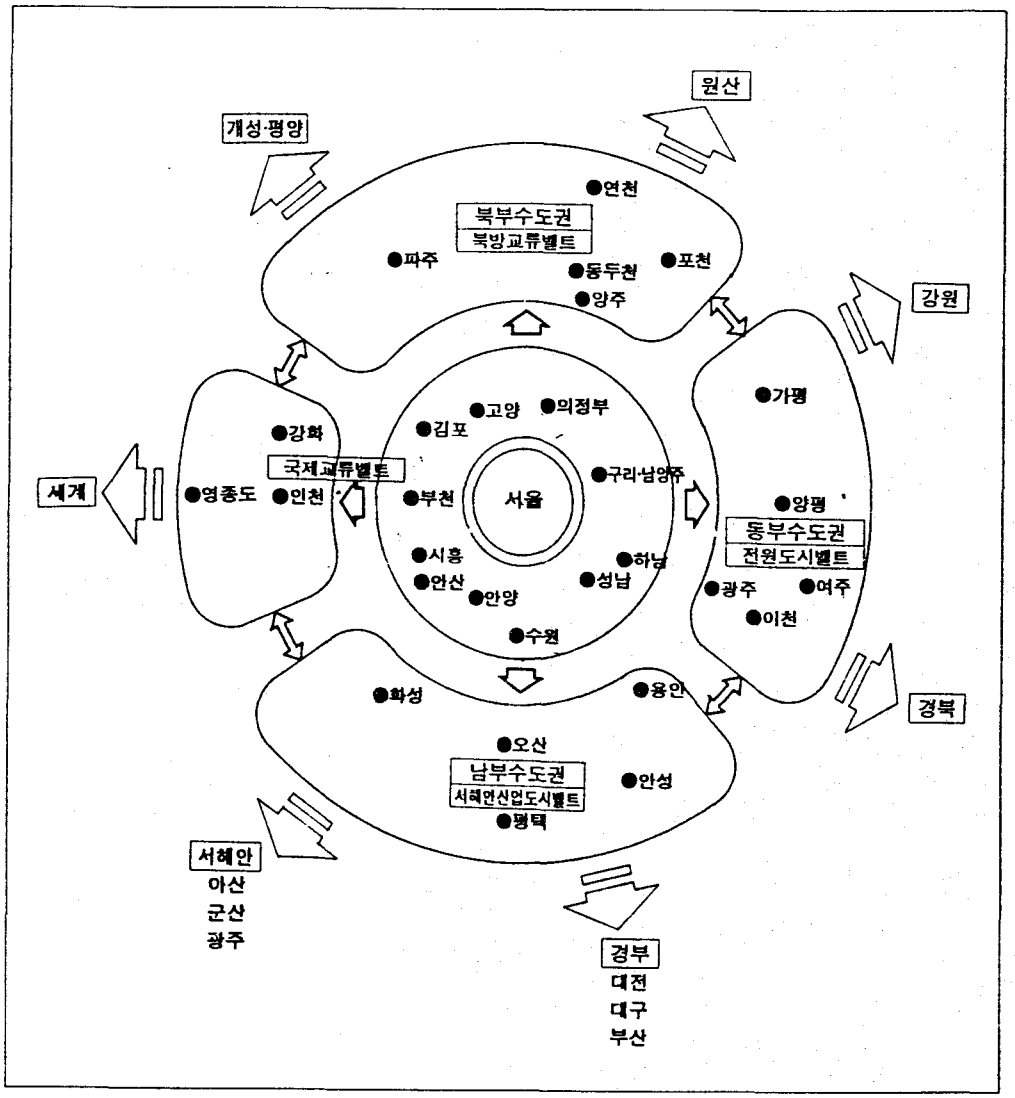
2. 공간구조 개편방안

1) 서울-인천지역을 국제교류의 중심축으로 정비

o 「서울-인천-영종도」축의 국제업무공간화 추진

- 동북아 중심지로서의 국제금융, 첨단정보 및 통신 등의 국제기능을 강화
- 대형 컨벤션센타, 전시장 등 국제교류 및 업무시설의 확충
- 인천국제공항의 주변에 「국제업무공간」 조성

수도권 공간구조 개편방향



○ 국제교역기능 및 물류수송기반의 강화

- 인천공항·항만의 복합수송기능 강화 및 텔레포트 연결로 교역중계기능 확보
- 경인운하건설 및 서울외곽순환교통망 구축으로 수송능력 확충

○ 경인축의 공간구조 고도화 및 서울 주변도시와의 연계기능 강화

- 과밀화된 서울기능의 지방 및 수도권외곽 이전을 적극 유도
- 국제경쟁력 강화기능을 집중적으로 수용
- 서울주변도시의 서울의존도 완화 및 자족기능 수행능력 강화

2) 안산-아산만 축에 수도권산업의 집중 배치

ㅇ 서해안에·수도권 필수산업의 입지를 유도

- 아산만권 광역개발사업의 본격 추진으로 수도권의 개발압력을 분산
- 안산-아산 공단간 임해산업의 배치 및 내륙공업단지간의 연계

ㅇ 수도권과 지방간의 연계물류유통거점지역으로 조성

- 아산신항과 인천항간의 물류연계망을 구축
- 고속도로-산업철도 등을 연계하는 광역수송망 건설 및 주요 교통결절지역에 물류유통단지 조성

ㅇ 수도권 남부지역의 자족적이고 쾌적한 지역생활권 형성

- 기존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배후 농촌과 조화되는 정주공간을 구축
- 지역생활권내에 자립적인 교육·문화·여가시설을 보강

3) 파주-동두천-포천 지역에 북방교류기능 배치

ㅇ 남북통일에 대비하는 평화의 공간으로 조성

- 남북간 인적·물적교류에 대비한 남북교류 및 경제협력단지 등의 조성 검토
- 기존 중심지의 통일지원기능 특성화로 남북교류 전담도시기능 수행

ㅇ 접경지역의 자연환경 보존 및 관광자원화

- 접경지역의 자연생태계 조사와 자연환경 보존방안 강구
- 자연생태공간과 역사적 유적지 등을 연계하는 광역관광권을 조성

ㅇ 기존도시를 중심으로 자족거점지역 육성

-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인구정착 및 배후 지원기능을 강화

- 중소공단, 출판문화, 관광 등의 전문단지를 조성하여 자족기반을 확충
- 지역간 연결을 위한 광역교통망 및 남북교류교통망 정비

4) 이천-양평-가평 지역을 전원도시벨트로 조성

○ 자연친화적인 자족적 전원생활공간으로 정비

-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전원주거도시로 개발하고, 새로운 주거수요에 부응하는 실버촌, 휴양촌, 주말농원 등을 확대
- 무공해·첨단 소규모 공업단지, 연구단지 등을 조성하여 자족기반을 확충

○ 하천과 자연을 활용하는 종합관광지대로 개발

- 한강수변의 여가공간화 및 종합 휴양관광지 조성
- 농업특화단지, 도예산업 등의 관광자원화 촉진

○ 지역간 연계교통망의 확충

- 남북축의 도로망 건설 및 경춘·중앙선 등의 복선화 추진

Ⅳ. 권역별 정비방향

1. 권역구분 및 정비전략

가. 권역구분

○ 지역특성에 따라 과밀억제, 성장관리 및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

- 과밀억제권역 :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 성장관리권역 :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

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자연보전권역 :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 등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o 중요한 국가정책적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은 합리적인 방향에서 권역조정을 검토

나. 권역별 정비전략

- 지역특성을 살린 권역별 정비의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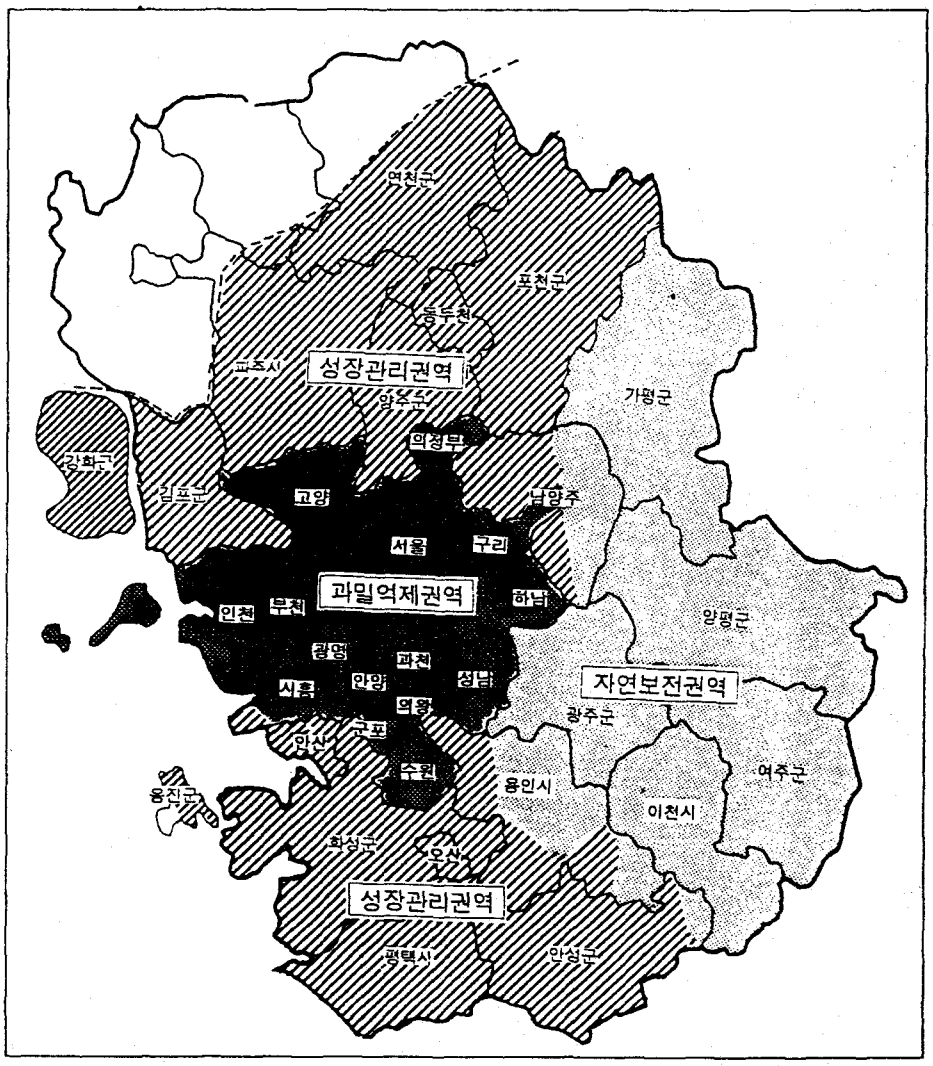
과 밀 억 제 권 역	⇒	과 밀 화 규 제 도시문제 해소
성 장 관 리 권 역	⇒	이 전 기 능 수 용 자족기반 확충
자 연 보 전 권 역	⇒	한강수계 보존 주민생활 불편 해소

다. 수도권 권역별 현황(1994)

- 수도권 면적의 17.8%인 과밀억제권역에 87.6%의 인구가 집중

구 분	과 밀 억 제	성 장 관 리	자 연 보 전
면적(㎢)	2,091	5,820	3,831
인구(천인)	16,737	1,782	593
행정구역	서울, 인천시외 14개시	7개시 8개군	3개시 5개군

< 수도권 권역구분도 >


연천군
포천군
동두천
교조시
성장관리권역
양주군
가평군
의정부
강화군
김포군
고양
남양주
서울
구리
과밀억제권역
하남
인천
부천
양평군
광명
과천
시흥
안양
성남
자연보전권역
의왕
광주군
군포
안산
수원
여주군
용인시
용진군
이천시
화성군
오산
성장관리권역
평택시
안성군

2. 권역별 정비방향

가. 과밀억제권역

1) 기본방향

○ 인구집중유발시설 입지 규제 및 외곽분산 추진 ○ 첨단정보, 국제교역 및 고급서비스기능 위주의 권역기능 정비

2) 부문별 정비

□ 도시정비 및 토지이용

- 대도시의 과도하게 집적된 시설은 부도심 및 외곽으로 분산
- 주변 위성도시에는 자족적 일반업무·유통 등 대도시 유출기능 유치로 자족적 도시기능을 보강
- 복지, 체육·문화, 역시시설 등 여가 및 문화공간을 적극 확충
- 시설이전용지는 주변여건과 기반시설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용도로 이용·관리

□ 공업의 배치

- 대기업공장의 신·증설을 억제하고, 장치형업종의 대규모공장과 재래형업종 등은 지방으로 이전
- 공업지역의 재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등 이용효율을 높이고 미래첨단·중소기업의 입지공간을 정비

□ 인구집중유발시설의 관리

○ 대학

-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의 신·증설을 억제
- 지방이전 대학의 대학단지 조성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 강구

○ 공공청사 입지의 제한

- 국가중추관리기능과 무역, 금융, 언론, 정보·통신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설의 제한적 입지 허용
- 업무가 특정분야에 한정되었거나 지방과 관련이 많은 기관 및 이미 지방으로 이전한 기관과 관련이 있는 공공단체의 지방이전을 유도
- 청단위 기관의 대전둔산지역으로 이전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그 부속기관도 이전을 검토

○ 대형건축물(업무·판매·복합용 건축물)

- 건축물의 규모는 주변의 환경여건과 교통, 상·하수도등 기반시설의 처리용량에 따라 결정하고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의 철저 시행
- 과밀부담금은 지역균형개발과 수도권과밀해소를 위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마련

○ 연수시설의 증설 억제

- 연수시설의 신축은 금지하고 지방의 연수시설 입지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토지이용제도를 개선

나. 성장관리권역

1) 기본방향

○ 수도권입지 필수시설의 지역특성별 배치
○ 지역중심지의 자족기능 확충 다핵분산형 공간구조 형성

2) 부문별 정비

□ 도시의 자족기능 강화

○ 기존 중심지의 자족기반을 조성하여 과밀억제권역 인구의 유입을 촉진

○ 외곽지역의 고층, 고밀도 개발을 지양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경관, 녹지비율 및 공간계획에 관한 기준을 강화

o 광역교통망 및 공간구조개편과 연계한 계획적인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업무·상업·생산기능을 복합적으로 수용하여 자족적인 생활여건 조성

o 준농림지역의 토지개발기준 마련 및 도시지역 편입 등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관리를 강화

o 서해안매립사업은 송도, 시화 1,2단계 등 현재 진행중인 사업외의 신규사업은 적극 억제

□ 공업의 배치 및 관리

o 공업지역은 과밀억제권역의 이전공장을 우선 수용하고 기존 공장밀집지역의 정비에 치중

o 공업단지내 및 공업지역간의 업종별 계열화로 생산효율성 증대

o 미래첨단산업의 입지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 공업지역 공급계획 ('96-2001) 〉

(단위 : ㎢)

시·도	공 급 면 적 (㎢)		
	계 (㎢)	기존계획	추가공급
계 (㎢)	25.5	18.7	6.8

주) 공업지역 : 공장용지에 녹지, 공공시설이 포함된 일단의 지역

□ 인구집중유발시설의 관리

o 대 학

- 4년제 대학의 신설은 계속 금지하고 증원도 억제하며,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해 오는 대학을 수용
- 개방대학과 전문대학의 신·증설은 산학연계 가능지역에 우선 적용

o 공공청사

- 기존 공공청사의 증축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지방에서도 업무수행이 가능한 기관은 지방이전을 유도
- 신축은 무역·금융·정보통신·첨단과학등 국가경쟁력 강화기능과 업무가 주로 수도권에서 이루어지는 기관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허용

o 연수시설

- 연수수요가 수도권내에서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

□ 여가 및 문화공간 확충

o 다양한 여가공간의 확충

- 도시근교에 산림욕장, 자연학습원, 관광농원, 국민관광지 등 확충
- 서해안에는 해양자원등을 이용한 종합관광휴양시설을 확충

o 문화·생활체육시설의 지역간 균형있는 배치

- 생활권 중심지에 대한 문화·생활체육시설의 적극 확충
- 역사 및 문화유적지를 적극 발굴하여 관광자원 및 여가·문화공간으로 활용

다. 자연보전권역

1) 기본방향

o 상수원보호를 위해 수계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과 일반지역의 차등규제
o 수도권 주민의 자연환경접촉 및 여가위락의 장소 제공

2) 부문별 정비

o 중소도시의 자족기반 확충으로 인구정착을 유도

- 지역경제기반 구축을 위한 도시형 산업단지, 연구단지를 조성
- 도시권내 자연취락을 환경친화적 전원주택지로 정비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의료, 휴양시설을 갖춘 노인복지시설을 확충

o 주변도시와 배후농촌지역을 연계한 도농복합형 개발

- 중심지의 유통, 업무, 교육·문화 등 도시서비스 시설을 확충
- 주변배후지의 중심지시설 이용체계 개선

o 대규모의 택지·공장용지등 개발사업 금지 및 공해성공장의 신·증축 규제

o 환경보존이 가능한 선에서 수도권주민 여가공간 확충을 위한 관광지조성사업 규제의 개선방안 강구

□ 공업의 관리 및 배치

o 첨단형 소규모 공업용지의 제한적 조성

- 저개발 시군에 대한 제한적 공업입지 조성
- 경지정리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수질보전에 영향이 많은 지역 및 임상이 양호한 지역은 억제

o 계획입지 중심의 전문화된 공단 조성

- 첨단산업과 연구·기술·정보처리등 지식산업을 중심으로 환경관련법령에 의거한 적정 업종을 유치

3) 인구집중유발시설의 관리

o 대학

- 4년제 대학의 신설을 금지하고 입학정원의 증원도 억제
- 전문대학 신·증설은 산학연계의 경우를 우선적으로 추진

o 공공청사

- 공공청사의 신·증축은 수질오염의 영향이 적고 농지 및 산림의 훼손이 적은 지역으로 한정

o 연수시설

- 기존 연수시설의 증축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신설은 억제

Ⅴ. 광역시설의 정비

1. 교통시설의 확충

가. 철 도

○ 단계별 철도망의 확충 지속

- 2001년까지는 기 확정노선 및 서울중심의 방사형 철도망 구축
- 2001년 이후는 서울우회노선 위주의 철도망 확충

○ 도로의존형 교통체계를 저비용·고효율의 철도수송체계로 개선

- 도시철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철도수송분담율을 28%('94) → 50%(2001)로 제고(10개 노선 312km)

구 분	노 선
신 설	제2경인선, 인천국제공항선, 남부동서선, 일산선, 분당선연장, 이천선, 동부남부선
복복선화	경원선, 경인선, 경의선

○ 수도권 순환선 및 지역간 연결망 확충(12개노선 521㎞)으로 분산기반 구축

구 분	노 선
신 설	서해안선, 수인선, 서부외곽순환선, 아산항연결선
복선화	경춘선, 경의선, 경원선, 중앙선 경부선 (3복선, 복복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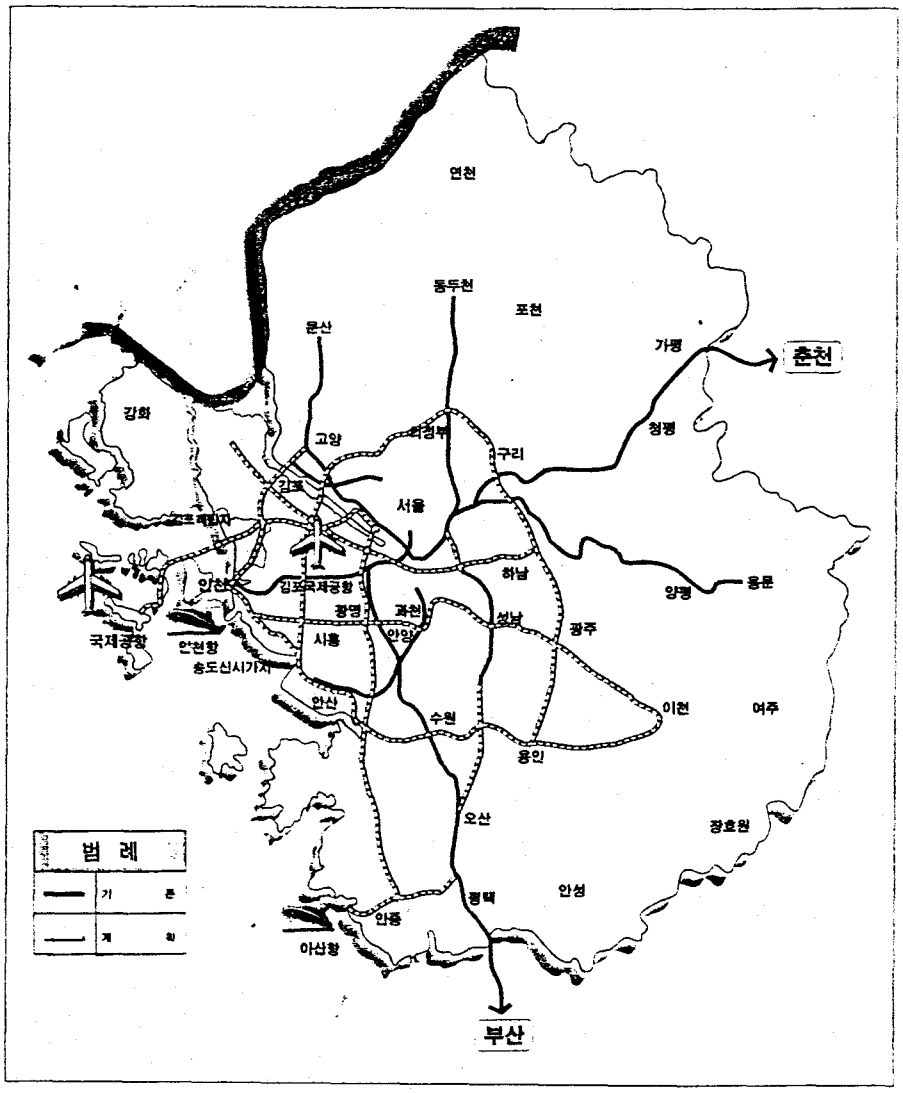
나. 고속도로

○ 교통밀집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고속도로망 확충(4개 노선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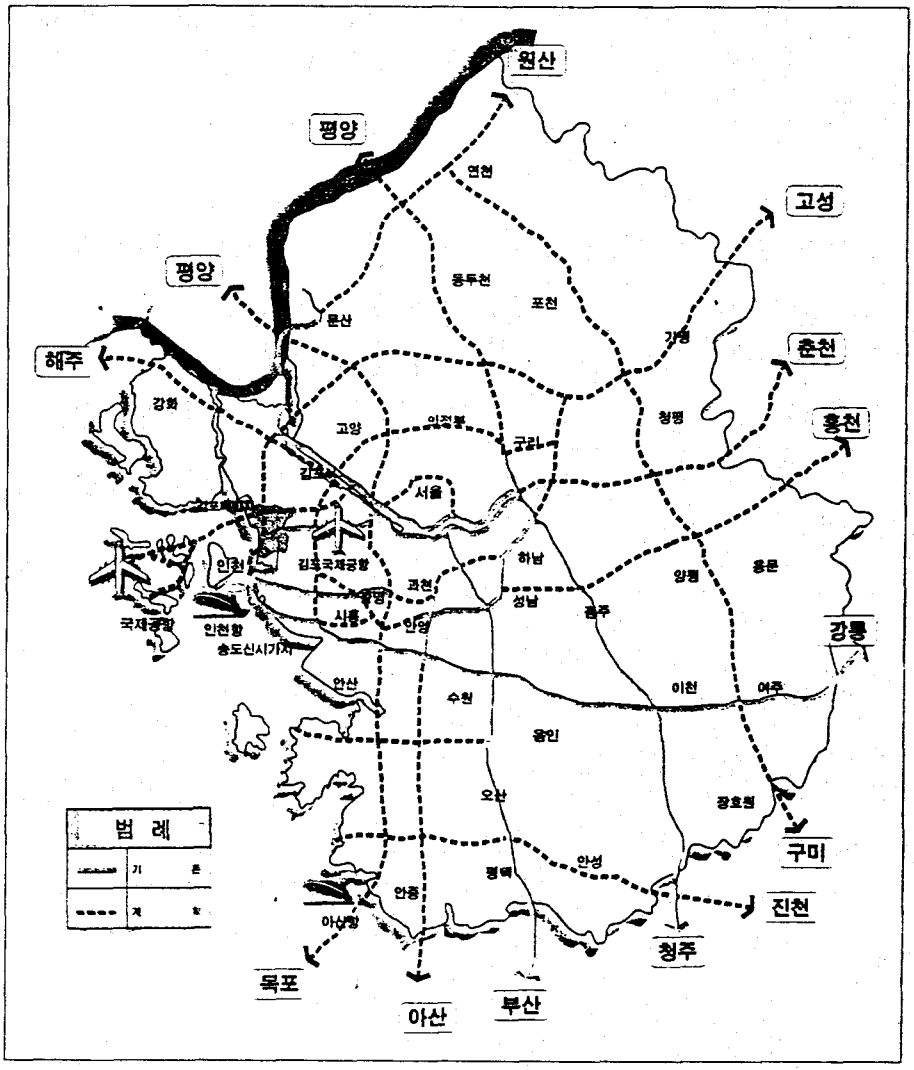
- 2001년까지 서울 내부순환 및 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로 교통밀집지역 교통난 완화
- 2011년 이후는 지역간 연결망 중심의 추가노선 건설

o 장기적 안목의 다핵분산형 공간구조 개편을 촉진하는 외곽지역간 연결 고속도로 건설 (16개 노선 826㎞)

< 수도권 전철망 구상 >



< 수도권 고속도로망 구상 >



다. 간선도로

○ 고속도로의 연계 및 대체기능을 수행할 간선도로망 확충

- 읍면간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존 국도중심의 격자형 간선노선망(5x5)을 구축

- 장래 개발잠재력이 높은 지역 및 교통수요가 집중될 지역은 지방도, 군도를 중심으로 한 보조노선을 구상
- 읍급이상의 도시주변구간은 우회도로를 건설하고, 6차선 이상의 간선도로 교차지점에는 고가도로 및 지하도등 입체교차시설을 설치

라. 공 항

○ 인천국제공항의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세계의 중심공항으로 육성

- 1단계(1999년) : 활주로 2본, 여객·화물터미널등
- 2단계(2011년) : 활주로 1본, 공항 및 접근시설등

※ 완공후 여객처리 (연간 백만명) : 13('94년) → 46(2011년)

○ 김포공항은 관제시설개량등으로 항공처리능력을 확충하고 신공항 개항후에는 역할을 분담

마. 항 만

○ 아산신항의 개발

- 아산만권 광역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아산국가공업단지의 지원과 인천항의 기능을 분담하는 수도권의 거점 항만으로 개발
- 1997년까지 년간 1,500만톤, 2001년까지는 년간 2,800만톤의 화물처리능력을 갖추고 연계교통시설 및 정보시스템이 완비된 항만으로 건설

○ 인천항의 정비확충

- 연안화물, 수출입화물 및 컨테이너를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복합 항만기능 강화
- 6,7부두 축조 및 기존시설의 정비로 하역능력을 확충하여 수도권 긴급물동량 처리능력을 제고
- 인천북항개발은 민자유치 검토 (5만톤급 5선석, 처리능력 3백만톤)

2. 물류유통

가. 유통시설 확충

○ 교통요충지에 대규모 물류·유통단지를 건설

-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 (처리능력 1,357천TEU/년), 부곡화물터미널(처리능력 3,170천톤/년) 건설
- 유통단지 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유통시설용지를 원활히 공급하고 전국 물류거점간 대량 수송체계로 개편

○ 지역단위의 물류체계 구축

- 서울, 인천은 방향별로 유통단지를 분산배치하여 도시내 교통혼잡 완화
- 수도권 외곽지역의 교통결절지역에 창고시설, 집배송시설, 도소매시설, 화물터미널등의 복합물류단지를 조성
- 물류단지의 지역정보센터 및 지역단위계획과의 연계개발

○ 국제화물의 유통중심지로서 기능을 강화

- 공항·항만에 배후연계시설을 확충하고 국제물류센타 기능을 보강
- 연안화물 처리를 위한 전용시설을 확충

나. 수송구조의 합리적 개편

○ 경인지역의 컨테이너 철도수송 분담율 제고 ('93년 28%→2003년 43%)

- 고속철도에 연계되는 컨테이너 운행열차 증설, 장대열차 운행
- 의왕ICD와 부산간의 직행열차 운행

○ 연안해상수송 활성화와 경인운하건설 추진

- 컨테이너 화물의 연안해상수송 활성화를 위한 항만 및 전용시설의 건설 확대 (인천항 '93년 25천TEU→2003년 94천TEU)
- 경인간 대용량 화물의 경제적 운송을 위하여 인천-한강-행주대교간을 연결하는 경인운하(19.1㎞)를 건설하고 화물터미널건설 등 부대사업 추진

○ 주요 물류거점의 배후 교통시설계획은 수도권 광역종합교통계획과 연계하여 추진

다. 종합물류정보망 구축

○ 종합물류정보망의 실용화 조기실현 추진

- 화물추적, 재고관리, 선박스케줄, 통계자료 조회서비스 등의 해운물류정보망 체제 확립
- 열차의 편성·운영, 차량의 이동·배치 등 철도운영관리업무의 전산화
- 무선운행허가, 전자운행일지, 적정화물차량배치, 최적경로, 과적여부 등 운행정보의 제공을 위한 화물유통·운송정보망 구축

○ 물류산업에 대한 세제, 금융 및 입지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강화하고 공업단지내 집배송단지의 설치를 유도

○ 인천국제공항과 인근 화물터미널, 항만시설등의 지역간 물류 초고속정보망을 확대 실시

3. 정보통신

○ 초고속정보통신망 건설 추진

- 국가·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을 우선적으로 구축(2010년)
- 지역중심도시, 산업체 밀집지역등 정보화가 용이한 지역에 우선 초고속공중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2015년에는 일반가정까지 연결

○ 지역정보센타의 육성으로 지역간 정보격차를 해소

- 지역중심도시에는 광역정보센타를 설치하고 읍·면·동에는 하위지역정보센타를 설치하여 정보화를 확산
- 광역정보센타는 지역정보공급의 거점역할을 수행하고 산업·행정 등 공공성이 높은 정보서비스를 공급하며, 하위지역정보센타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서비스를 공급

○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한 텔레포트를 개발

- 지역특성 및 개발방향에 맞는 텔레포트를 개발
- 대도시의 경우에는 도시외곽에 텔레포트건설을 유도하여 도심기능의 분산과 부도심기능의 활성화에 기여

4. 용수공급

○ 안정적 용수확보를 위한 신규 수자원 개발 확대

- 2001년대 이후의 용수수요를 대비하여 영월댐의 건설을 2001년까지 완료
- 2011년까지 추가댐을 건설하여 30억톤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 추진
  · 댐공급율 : 43%('94) → 54%(2011) 확보
- 수도권내 용수의 균형공급을 위해서 수도권 동남부지역은 남한강 본류에서 수원을 확보·공급

○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광역용수공급망을 지속적으로 확충

-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220만톤/일, 22개시군)을 계획대로 추진
- 수도권 6단계(110만톤/일), 7단계(150만톤/일) 사업의 지속 추진
  · 영종도, 평택, 송탄, 김포, 남양주지역 등의 용수 공급
- 경기북부권 광역상수도(15만톤/일)를 2001년까지 건설하여 동두천, 포천 등 4개 시군에 생활 및 공업용수를 공급

○ 용수공급의 계획적 사용을 도모

- 용수공급은 광역상수도에 의한 공급을 우선
  · 기존의 광역상수도는 도시계획, 공공택지개발 등 계획사업에 우선 공급
  · 잔여분에 한하여 개별사업에 배분
- 광역상수도 공급이 곤란한 지역은 지방상수도 확충

〈 수도권 광역용수공급계획 〉

(단위 : 천톤/일)

구 분	1994	2001	2011
계	5,455	8,755	10,255
· 1-4단계	5,455	5,455	5,455
· 5단계(92-98)	-	2,200	2,200
· 6단계(97-01)	-	1,100	1,100
· 7단계(01-11)	-		1,500

o 수원의 다원화와 용수수요관리시책을 추진

- 해수의 담수화와 지하수개발로 해안·도서지역의 물부족문제 해소
- 중수도, 절수형기기 개발, 노후상수도망 교체로 절약적 용수관리의 추진
- 댐원수·광역상수도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절수형 요금체계 도입

o 수질보전 및 수원함양을 위한 종합적 수자원 보전대책 추진

- 적정수준의 하천유지용수 확보 및 소규모 축산농가의 하수처리장 확충
- 산림육성과 개발제한으로 수원지역을 보호하고 하천 및 저수지 수질보전을 위한 법적·제도적규제 강화 등 종합적인 수질보전 대책 추진

Ⅵ. 환경보전과 관리

1. 수도권 종합환경보전대책의 수립·추진

o 한강수질의 개선 및 생태계 복원

- 팔당호의 수질을 Ⅱ등급수 → Ⅰ등급으로 개선하기 위한 환경기초시설 확충
  · 한강상류지역 하수처리율 : 40%('94) → 100%(2011)
- 하천복개를 억제하고 자연하천 조성을 통해 한강생태계 회복

○ 대기오염 저감대책 추진

- 서울, 인천 및 수도권 주요도시에 오존예보체계를 구축하여 차량운행제한 등 신속한 대응방안 수립
- 전철망의 확충 등 저공해 대중교통수단 위주의 교통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
- 경유차량 비율을 연차별로 낮추고 시내버스와 대형트럭 등 경유차량에 매연처리장치 장착을 의무화

○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과 원활한 입지 도모

- 폐기물의 안전·위생처리를 위하여 지역별로 위생매립지 및 소각·재활용센터를 대폭 확충
  - 혐오시설의 환경정화능력을 높이고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도모
  -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스포츠·복지·생활환경 교육시설의 에너지원으로 활용

○ 매립지의 토지이용방안 모색

- 난지도 등 매립완료지역의 환경복원대책 마련
- 수도권 쓰레기광역매립지에 환경연구 관련시설을 유치

○ 「수도권 그린네트워크」 구축

- 서해안과 한강, 비무장지대의 생태연결지대, 주요 산악축과 도시내 공원 등의 녹지대 조성을 통한 대단위 그린네트워크 구축
- 도시내 녹지공간체계를 구축하여 대단위 그린네트워크와 연결
- 물과 녹지, 생물들을 조화시켜 지역특성에 맞는 자연생태공간을 조성하고 휴식·친수·자연학습 공간을 확충

환경보전과 지역개발의 조화 도모

○ 환경친화적인 개발사업의 추진

- 개발계획의 입안시 환경오염 방지대책의 의무화, 오염배출량의 저감 등 환경보

전대책을 수립하고 사후관리를 강화

- 서해안의 임해공업지대를 연안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도모하는 통합적인 연안역관리계획 수립·추진

o 환경보전지역의 효율적 관리 및 환경기능제고 사업 실시

- 그린벨트지역, 상수보호구역 등 환경보전지역의 환경보전실태조사 실시
-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정비 및 보호조치 등을 추진
- 환경보전지역은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특별지원을 추진하고 복지사업과 소득증대사업을 적극 실시하여 주민의 불이익과 불편을 해소

o 주민참여형 환경관리체계 구축

- 지자체별로 환경정보에 대해 주민이 공유하는 체계를 확립하고 환경정책결정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
- 시·군 등 기초지자체별로 주민이 주축이 되는 환경보전기구를 조직하여 지역환경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

Ⅶ. 계획의 집행 및 관리

1. 계획의 집행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도권정비계획이 실효성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른 소관별 추진계획을 수립·시행
  - 소관별 추진계획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정비계획의 내용과 배치되는 관련계획은 수정하여 집행상의 혼선을 제거

2. 계획의 관리

○ 계획평가기능의 강화

- 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소관별 추진계획에 대한 집행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연초에 수도권정비위원회에 보고
- 건설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을 5년주기로 평가 보완하여 계획성을 제고하여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

○ 계획성과를 높이기 위한 수정·보완조치의 용이화

- 본 계획에 추가할 사항이나 보다 발전시켜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로 반영
- 수도권정비계획은 사회적 여건이 변화하거나 상위국가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신축적으로 운영

○ 조정 및 운영

- 수도권정비정비시책과 관련한 중앙정부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지방정부상호간의 이견 및 분쟁사항은 수도권정비위원회서 조정
- 수도권정비계획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신장되는 방향으로 운영

3. 재원조달

○ 예산의 우선 확보

-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업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고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재원을 확보
- 그 결과는 매년말 수도권정비위원회에 보고

○ 사업시행 주체

- 대규모 광역사업과 공공성이 강한 사업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
- 도시정비, 생활기반시설 확충, 지역주민의 요구와 지역특성화개발사업등 국지

적 사업은 지방정부 및 민간이 시행

- 택지, 공업단지, 관광지등 대규모개발사업에 따라 소요되는 교통시설, 환경기초시설, 용수공급시설등은 사업시행자가 설치

o 재원투자의 역할 분담

- 민간부문 : 민자유치로 수익성 있는 개발사업에 참여
- 자치단체 : 지역발전에 필요한 공공투자 재원을 부담
- 중앙정부 : 자치단체의 투자재원 부족분을 보완하되 가급적 지방발전을 위한 투자에 주력

o 중앙정부투자가 불가피한 경우 지방도 일부재원을 부담하는 매칭펀드제도 실시

주택회보